

대기업 사익편취 기준 구체화·물량몰아주기 규제 완화

공정위,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부당한 이익’ 판단기준 규정 물량몰아주기 ‘합리적 고려·비교’ 과도한 규제… 선택적 요건으로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

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바꾸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 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 10년간 피해자 42% 사망

고용노동부가 21일 맨홀 등 밀폐공간 근로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때이른 더위로 오페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 362명 중 사망자 수가 42%인 154명에 달했다.

오페수처리를 비롯해 정화조, 축산 분뇨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발생, 각종 관수로,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시 황화수소 또는 산소결핍 발생 등이 고용부가 꼽은 주요 밀폐작업장이다. 또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시 산소결핍,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위험요인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내부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안전보건소

안전보건영상공모전 개최 최우수작 상금 200만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21일 ‘위험성평가 및 안전문화 활동’을 주제로 안전보건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나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활동이나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안전행동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가 상업적 의도 없이 직접 만든 창작물(UCC) 및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제작물(브이로그)이 허용되는 등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단 영상물은 5분 내외 분량이며 본인이 직접 촬영·편집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16일까지이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출력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통해 출품작 가운데 수상작 13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작 1점엔 상금 200만 원과 고용노동부장관상, 우수작 2점엔 상금 100만 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자율주행기술, 국제표준안 단계 진입

현대차·한국車연구원 제안한 ‘자율주행 위험 최소화 조치’ 통과

한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국제표준이 국제표준 직전 단계에 진입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시작된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5~19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제16차 지능형교통시스템(ISO/TC 204)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이 회원국 투표를 통해 국제표준 발간 직전 단계인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표원과 IOS 기술관 리이사회 이사인 KAIST 문영준 교수를 단장으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36명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운영 모습.

/서울시

이 참여한 한국대표단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0개국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26건의 자율주행 국제표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에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2년 반 동안

의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통과해 국제표준 제정에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 표준은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이상을 일으켰을 때 자동으로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 설계 방법이다.

이 표준안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수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

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개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율주행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까지 한국 주도로 제정 완료된 ISO 국제 표준은 총 16종이며,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아이템은 총 26건이다.

이 가운데 국제표준안 단계에 진입한 표준은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동적 데이터 및 지도 데이터베이스 사양’, ‘자율주행 버스의 연결성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성능 테스트’,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긴급 서비스 지원 안내’, ‘ITS 개인용 ITS 스테이션 기반의 옥내외 원활한 포지셔닝을 위한 ITS 시스템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 등 6개다.

이번 회의 기간 중 국표원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와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 ‘한-미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리산 침엽수 서식지 21% 생육상태 취약

국립공원공 “개체군 쇠퇴 경향 보여”

지리산 상록침엽수 서식지 가운데 21%에 달하는 지역의 나무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체수가 대폭 줄거나 고사목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아(亞)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4천772그루)로 진단했다. 공단 측은 열 달가량의 정밀진단을 실시해 생육상태 ‘취약(4등급)’ 지역이 11.4%(11.7㎢), ‘매우취약(5등급)’ 지역이 9.6%(9.89㎢)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매우양호’ 지역을 1등급, ‘양호’를 2등급, ‘보통’을 3등급

으로 분류했다. 공단에 따르면 생육상태 1등급 지역은 5.1%에 불과했다. 2등급이 15.7%, 3등급 58.3% 순이다.

공단은 “반야봉과 중봉 등 지리산 서부지역 봉우리 중심으로 매우취약(5등급) 지역이 분포한다”며 “대부분 구상나무가 분포하나 생육 밀도 낮고 후계목 발달이 적어 개체군 쇠퇴의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고산대란 산림한계선(수목이 숲을 이루는 지역)과 고목한계선(키 큰 나무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 지역) 사이의 전이지대를 가리키는데 한반도에는 가문비나무·눈향나무와 같은 냉대성침엽수가 주로 분포한다. 아고산대는 지리산을 비롯해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소백산·덕유산 등 백두대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배달·렌트社,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서울 맥도날드·경주 카빙 예비실증

서울과 경주에서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가 참여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배터리 교환사용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와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 국내 생산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전기이륜차가 활용된다.

실증에는 서울 맥도날드 2개소(강남

청담 DT점, 은평 구산점)와 경주 황리단길 관광 렌트사업자 카빙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에서는 운영 최적화 서비스, 배터리 이상 및 위험 예측 모델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스테이션의 충전 성능과 기능 측면 사용자 편의성 검증, 안전성 분석 등이 이뤄진다.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과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